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 활 섭 의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준비 관련

☒ 장동 탄약창 이전 계획 관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송 활 섭 의 원

●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대덕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지만 내집 장만이 어렵고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세대의 먹먹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이야기는 비단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전시 청년인구는 2024년 33만 5천 명에서 2030년 28만 5천 명으로 약 6년 사이 5만여 명이 감소해 고령사회인 상황에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층의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공사·공단 등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취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대전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공공기관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으로 특허전략개발원·임업진흥원·기상산업기술원·기상청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2023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5개 공공기관은 엄격히 따지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에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공기관 이전은 출자·출연금 투입 없이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가계에 단비와 같은 일이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산업 특성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밝혔고, 시장께서도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잘 대비해서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전력투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전력투구는 무엇입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토부의 발표를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점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5월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도 이전을 건의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2차 지방 이전 대상기관이 정해지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도 무늬만 혁신도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치대상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기관 유치는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에 위치한 금융공기업 일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23년에 국제금융 센터지수가 하락했다고 영국의 지엔컨설팅그룹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중점 유치대상으로 지명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미 대전보다 먼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북은 2023년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경남은 2022년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북 남원시, 충남 당진시·청양군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이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에 걸맞은 논리와 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지자체를 직·간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이 타 혁신도시보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연축지구·대전역세권지구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대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12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02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2월 14일에 보도된 뉴스로 아직도 대전은 충남·세종과 함께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등 4개 전략산업과 양자, 핵융합까지 미래 신산업의 집약적 요충지이자 과학수도입니다.

시장께서도 대전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외국인의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역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동아시아 시장 진출에 유리한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곳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은 세금 감면, 임대료, 시설자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구역 입주기업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보다 고용창출과 수출성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도 일류경제도시라는 기조 아래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과 파급력이 큰 만큼 지정요건이 점차 세분화되고 엄격해져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대전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대전시가 세종의 3곳을 포함해 유성·신동·둔곡과 대동 그리고 안산지구의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대동과 안산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전이 지정 신청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다면 추진상 문제가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 확실히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2008년 5월 지정된 한국의 대표 경제자유구역 경기도의 추가 지정 추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를 실시, 2022년 11월 추가 지정 후보지로 고양과 안산을 선정하였고, 연내에는 산자부 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는 지정 추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준비하는 등 지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성이 입증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지난해 미승인된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미승인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정 요청과 관련된 시장님의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지정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지난 3월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었는데 신청일정과 지정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동 탄약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장동에는 대청호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계족산이 위치해 있으나 그 부근에는 자연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거대 탄약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1950년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우리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이 사용하는 탄알과 화약 등을 보관했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한국군에게 관리 이양되어 현재는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 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건설 당시 장동은 옛 대덕군 신탄진읍의 인적이 드문 외딴 오지였으나 상점이 수십 개씩 들어서 한때 시내 변화가보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적도 있습니다.

1989년 장동이 속했던 대덕군이 대전에 편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우리 지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상권이 사라졌으나 지역주민들은 언젠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 큰 희망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거나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며 신탄진과 대전 시내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탄약창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km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자연녹지 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탄약창과 불과 350m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대전의 대표 낙후동네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4차 산업 기반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이 목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장동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 제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대전 도심의 시민들과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동 탄약창은 시설 특성상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9년 주민 540여 명이 국회에 탄약창 이전을 청원한 바 있고 2013년 장동 공여구역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탄약창 이전과 관통 도로개설을 요구하였습시다만 그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장동~이현간 도로개설 사업비 총 24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동과 용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660여 명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탄약창 이전인데 설마 250억 원 규모의 도로개설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전시가 탄약창 대체시설 조성 후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과 단계적으로 이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동과 용호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자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장동 탄약창의 이전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50탄약대대가 이전한 자리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인 박달스마트밸리를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로 대덕구 장동 일대가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기대하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공공이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원도심 혁신도시 완성과 균형발전은 물론 경제산업 기반 조성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송활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차 이전 관련 계획을 수립 예정인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맞춤형으로 이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 연축지구를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에는 철도, 정부청사, 청 단위 유관기관, 연축지구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우선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38개 중점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시 간부들이 매월 3, 4회씩 방문하거나 기관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유치에 대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철도, 특허, 과학기술, 산림, 우정사업본부 등 38개 기관을 중점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우리 시를 이전 후보도시

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우리 시로 올 경우 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이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소비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청 단위 기관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로 유관기관과의 협업 촉진은 물론 시너지 효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4월 3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 384명의 직원을 갖고 있고 서울에 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산림교육원과도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기관들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가 방침을 확정할 때까지 논의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협회들과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외식업중앙회도 지금 접촉을 해서 대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미승인 산업단지 포함 여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세종시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사전 컨설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대전 3개 지역과 세종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산산단 및 대동지구는 산업단지 승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산단, 대동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 보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올해 4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개 지구만으로 신청했을 경우 지정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주국방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는 차별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전략을 위해 안산산단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산단이 전임 시장 때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협약관계의 기준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감사원과 지금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안산산단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송활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산업부서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 이행,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및 기술 지원, 산업육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위해 행안부 기구·정원 협의 및 승인, 설립, 예산 확

보,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 탄약창 이전 계획과 이전 관련해서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동 탄약창은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하다가 1992년 미군 이전 후 현재까지 탄약 저장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탄약창 이전을 위해 국방부 및 군부대에 꾸준한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이전 부지 조성과 탄약고 설치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부대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추산 이전하는 데 약 1조 2천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국정과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기조에 맞춰 장동 탄약창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축소 건의 등 밀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소를 통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동 탄약창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도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장동 탄약창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탄약창을 이전하는 문제가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군사시설이기도 해서 이 문제는 국방부와 좀 더 치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